

백화점·대형마트 20℃ 이하로...
전철 운행간격 1~3분 늘리기로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전기 사용이 많은 건물의 난방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철 운행간격도 조정하는 등 정부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을 지정, 실내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건물에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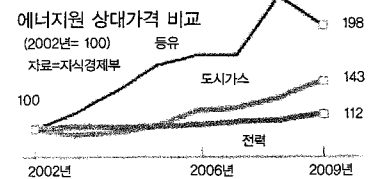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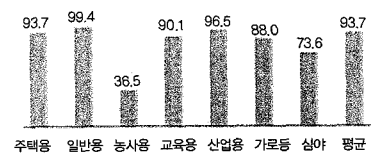
정부는 전력 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

지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간격을 현재보다 1~3분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급증한 난방용 전기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 난방기의 에너지 가격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난에 '밀지고 파는 전기' 냉가슴

- 한전, 원가의 93% 수준 공급...
혹한에 '값싼 난방' 수요 급증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수준 (단위: %, 2010년 8월 기준)



겨울철 전력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전기료 논란이 불붙었다. 원가보다 3.5%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의 '특혜'를 언제까지 일반 가정에서 별충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쌓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기료 원가구조를 정상화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1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난방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4년만 해도 난방수요가 겨울철 전력사용량의 17.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4.2%까지 늘었다.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기 소비량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기름값보다 전기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기름값은 국제 시세가 오르면 덩달아 올라가지만 전기료는 정부 통제를 받는다.

문제는 전기료의 원가구조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원가의 93.7% 수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은 36.5%, 심야전력은 73.6%에 불과하다.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밀치고 전기를 파는 셈이다. 그나마 일반용 전기는 99.4%로 원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고치기 위해 서라도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13년부터 도입하려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규개위는 지난달 13일 법안 심의 결과 “재심의를 필요하다”며 통과를 보류했다.

정부가 법안을 신설하려면 규개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2013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밀어붙이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중규제 논란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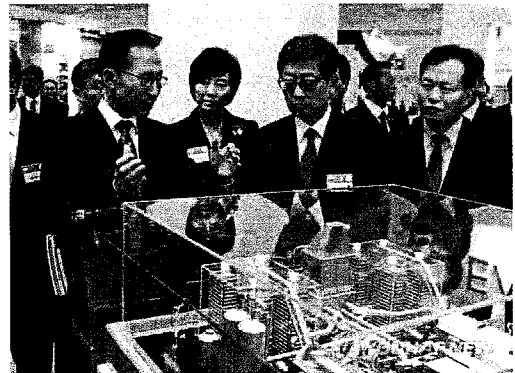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급제동’

- 규제개혁위, 통과 보류
- “부처 간 의견수렴 거쳐라”
- 2013년 시행 여부 불투명

배출권거래제 일지

2010년 11월 17일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
2010년 12월 7일	대한상의 등 18개 경제단체,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 건의 정부·경제단체, 배출권거래제 공청회
2010년 12월 26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 “산업계 타격 심각, 도입 늦춰야”
2010년 12월 28일	일본, 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
2011년 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법안 재심의 결정

올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1조 지원



올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1조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

해 지난해보다 24.1%(1천 950억 원) 증가한 1조 3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 2천 528억 원에서 올해 2천 677억 원으로 149억 원 늘었다.

지정부는 박막 태양전지, 해상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및 8대 핵심 부품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석·박사 인력 양성에도 100억 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198억 증가한 3천 118억 원이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에 900억 원, 그린홈 사업에 89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는 170억 원, 새만금 풍력시범단지 조성에는 4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온실가스 20% 감축해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등 774개 기관은 올해부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체계

